

한국의 일반국민과 전문가 집단 안보의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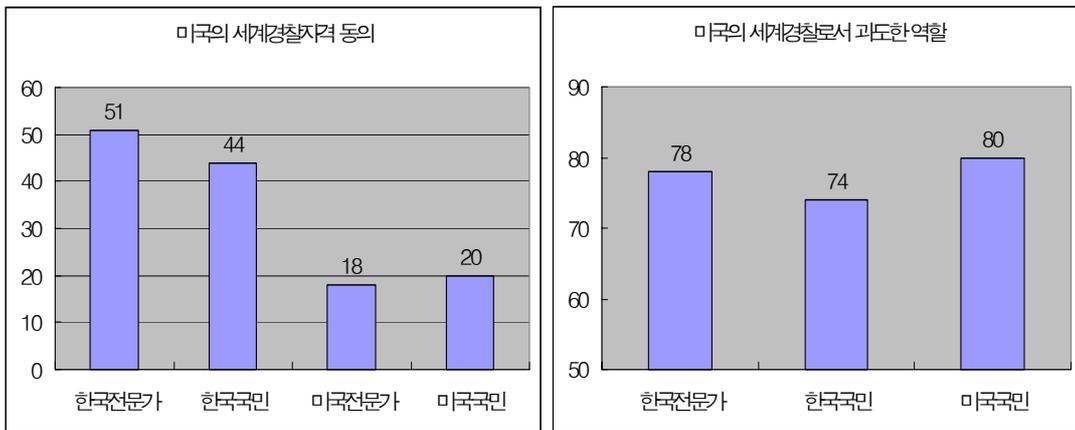
■ 전문가집단,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미국의 역할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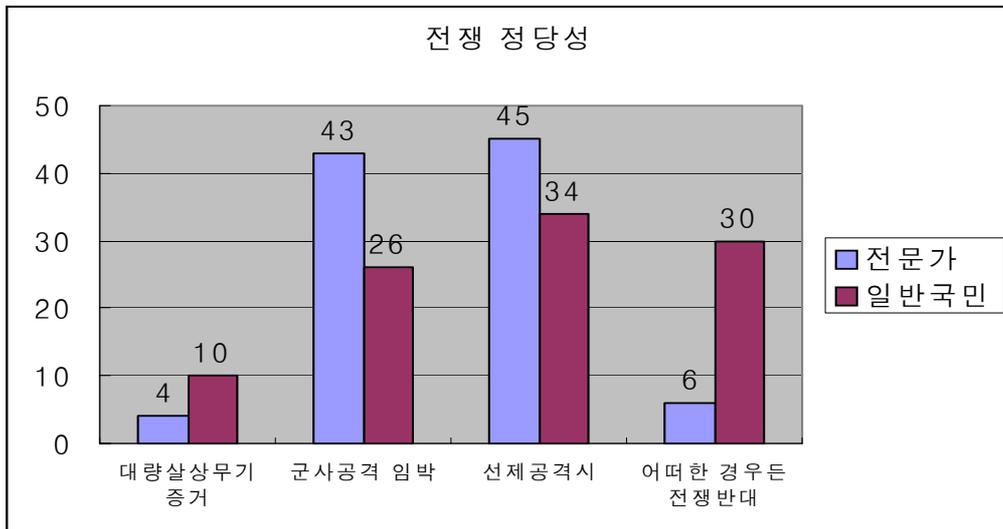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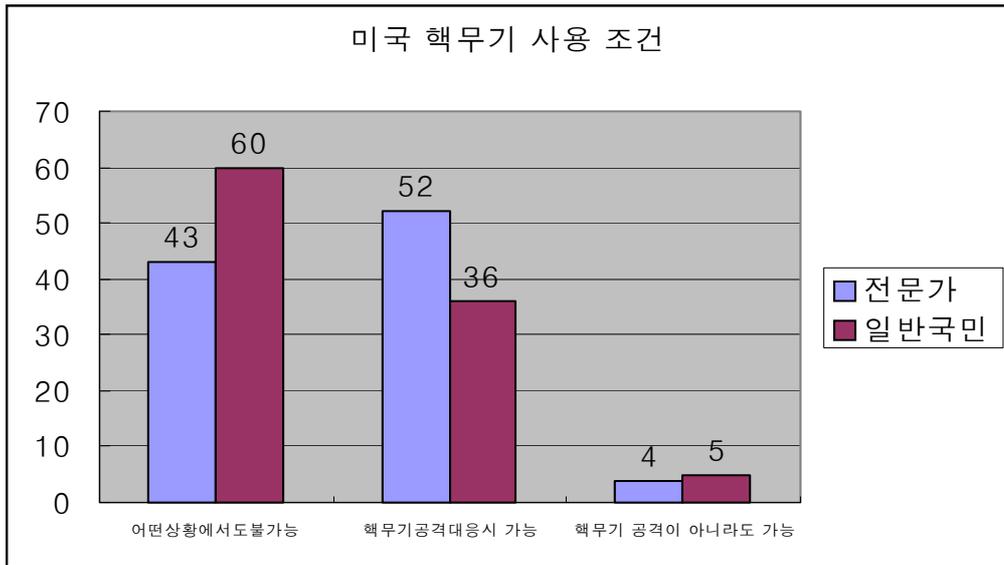
전문가, 미국의 세계경찰 자격 인정 51%, 현실주의적 전쟁관

한국의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 모두 미국의 전문가 및 일반국민에 비해 미국이 행하는 세계경찰로서 역할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51%가 찬성하고 있다. 한국의 일반국민들도 이에 못 미치지만 44%가 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미국 CCFR 여론조사결과는 같은 문항에 대해 일반국민의 20%와 오피니언 전문가의 18%만이 찬성입장을 표명함으로써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악화되는 이라크 전황 등으로 미국의 국제적 책임에 대해 부정적 태도가 확산된 반면 한국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국제관계가 미국의 힘(Power)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그 역할을 과도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에는 전문가 집단(78%)과 일반국민(74%)에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 전문가의 현실주의적 태도는 전쟁의 정당성 및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대한 인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외부 위협에 대한 군사력 행사에 대해 일반국민의 경우 ‘선제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30%에 달한 반면, 여론 주도층은 ‘상대국가의 군사적 공격이 임박’하거나(43%), ‘선제공격을 받았을 시’(45%)에는 전쟁을 벌일 수 있다고 본 반면, 6%만이 ‘무조건적인 전쟁 반대’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핵에 대해서도 일반국민이 미국에 의한 핵무기사용 가능성에 대해 60%가 ‘무조건 반대’ 입장을 취한 반면 전문가는 52%가 ‘핵무기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 관련 그래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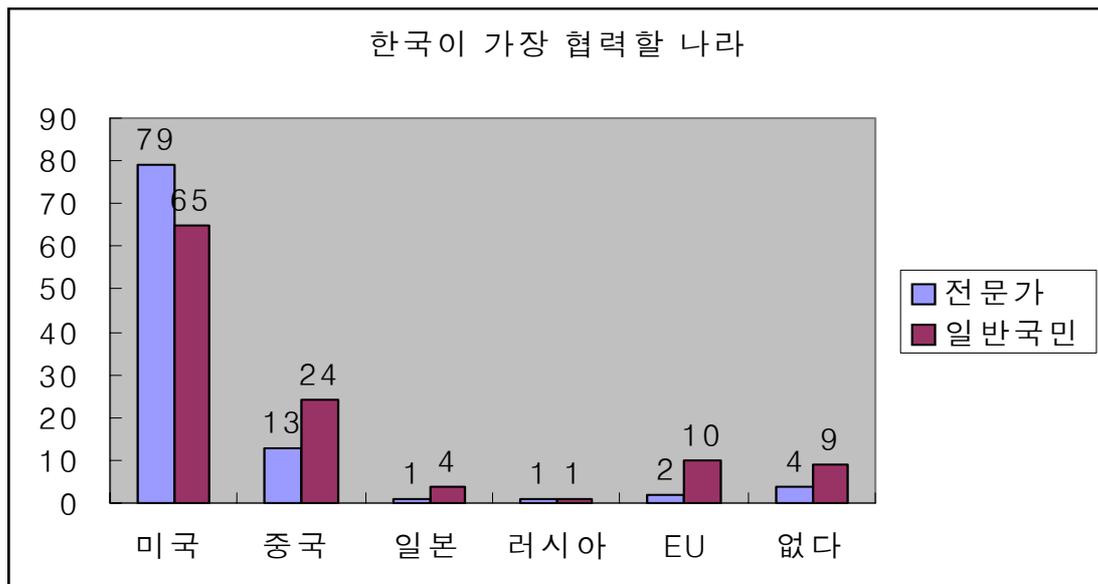
전문가, '현재의 한미동맹은 위기다', 일반국민,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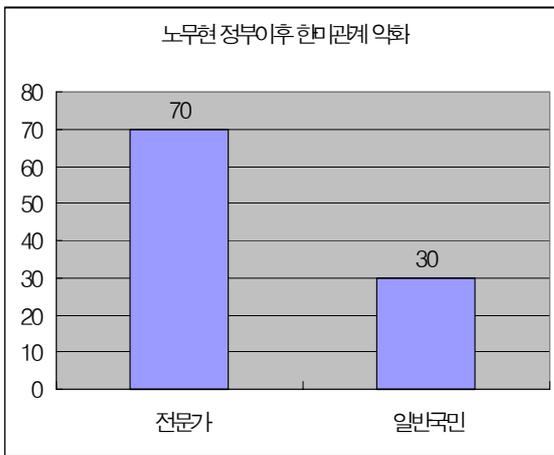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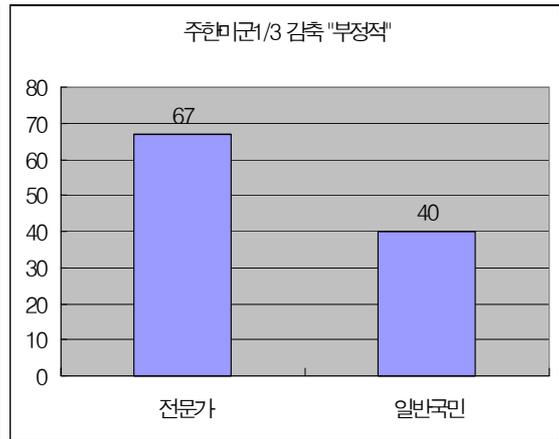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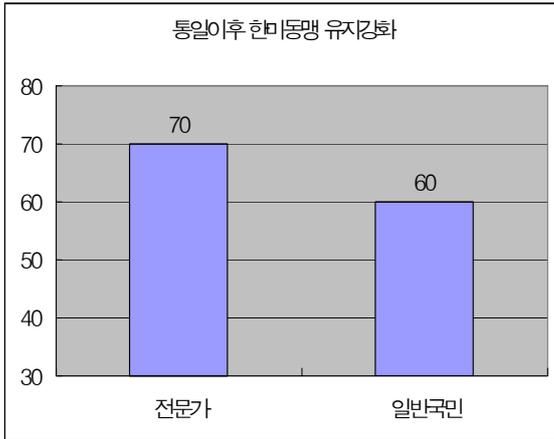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국민 사이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일반국민이나 전문가 공히 미국이 한국의 안보와 국익실현에 있어 관건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가장 협력해야 할 국가로서 미국에 대해 일반국민(53%)과 전문가(79%) 모두 미국을 일순위로 꼽았고, 중국(국민24%, 전문가13%)이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일반국민의 60%(더욱 강화 6%, 현수준유지 54%)와 전문가의 70%(더욱 강화 19%, 현수준유지 51%)이상이 '통일이후에도 한미동맹이 유지 혹은 강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로 나타나는 주한미군 변환(transformation) 과정에 대해서는 양 집단간 평가가 갈라진다. 우선, 지난 9월 3,600여명의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과정에 대해 전문가의 경우 상당한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민들의 경우 안보공백으로 여기지 않는다. ‘주한미군의 1/3 감축 계획이 안보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40%(다소부정34%, 매우 부정적6%)에 불과한 반면, 한국전문가들의 경우 무려 67%(다소 부정적59%, 매우 부정적8%)가 부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평가가 현저히 대비된다. 일반국민에 비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수의 감축이 미군의 신속대응능력의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한미군 수의 감축과 후방으로의 재배치가 결국 대북억제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참여정부 하에서 한미관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국민의 경우 31%만이 과거에 비해 악화되었다는 응답을 했지만, 전문가들의 경우 무려 70%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해 일반국민에 비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현재의 한미동맹을 위기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관련 그래프들





■ 전문가 집단과 일반국민, 대북 군사조치는 반대

미국에 대한 인식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 전문가와 일반국민이 대북인식에 있어서만큼은 공통된 인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양 집단 공히 상당한 위협을 느끼지만, 그 해법으로서는 북미간 대화를 통한 해법을 가장 선호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는 외교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일반국민의 75%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8%(매우 심각 39%, 약간 심각 49%)가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전문가 집단은 62%가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 79%(매우 심각 40%, 약간심각39%)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양 집단 모두 대다수가 북핵문제에 대해 우려와 위협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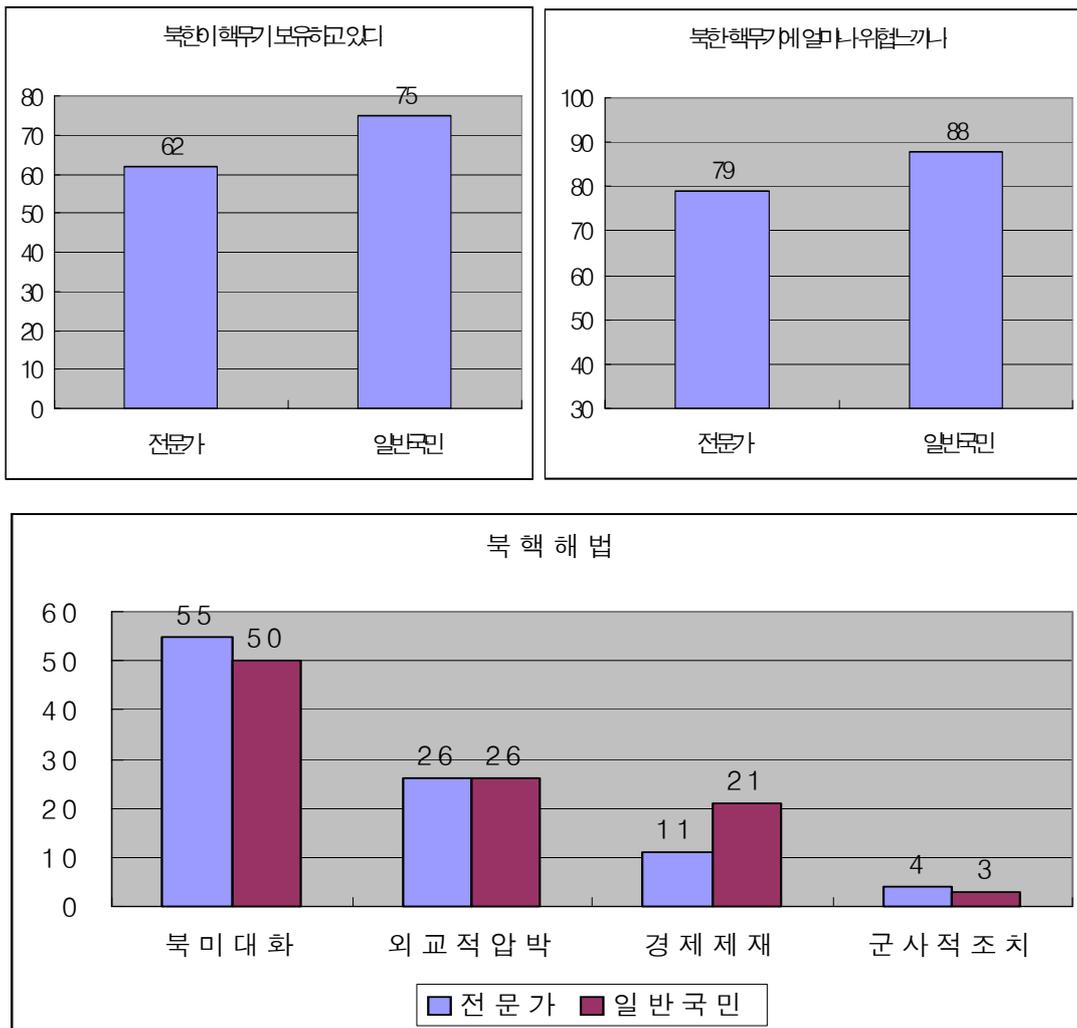
그 해결방식에 있어서도 전문가와 일반국민 공히 '북미간 대화'를 가장 현실 가능한 해법(일반국민 50%, 전문가 55%)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박수단'(국민26%, 전문가 26%)과 '경제제재'(국민21%, 전문가11%)가 그 뒤를 이

었다. ‘군사적 조치’를 지지한 응답자는 전문가4%, 일반국민의 3%에 불과하여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 및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는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전망에 대해서도 한국전문가와 일반국민의 다수(각각 53%, 52%)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반대로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함으로써 군사적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는 입장은 전문가의 21%, 일반국민의 19%에 불과하였다.

결국 전문가 집단의 여론조사 결과는 전문가들이 일반국민에 비해 국제질서 및 한미관계에 대해 현실적 태도를 보이면서도 북한핵문제 있어서는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대화와 타협의 외교적 해법을 선호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위협 못지않게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이 자칫 새로운 군사적 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공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관련 그래프들



북핵사태 전망

